

이달초 영하권 추위 전남 배 50% 피해

3년째 저온 피해...·키위·녹차·단감도

재해보험 장려보다 시설 지원대책 전환 서둘러야

4월 초 영하권 추위에 따른 전남지역 배·단감 등 저온피해 면적이 1519ha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내리 3년째 봄철 저온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도에서 피해 방지 시설 지원으로 농가 지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6일 발생한 이상 저온에 따른 전남지역 농가 피해 면적이 1519ha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배 1319ha, 키위 42ha, 녹차 42ha, 단감 12ha 등이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나주시 971ha, 영암군 354ha, 보성군 94ha, 곡성군 58ha, 구례군 35ha, 장

성군 3ha 등이다.

이 시기 전남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곳에 따라 최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꽃, 잎 등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떨어졌다. 일부 지역에는 서리까지 내렸다.

배의 경우 이상 저온 시기 직전인 3일 꽃이 만개하면서 인공수분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남 전체 재배면적 2855ha의 절반 가까이 저온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배 개화기에 영하 1.7도 이하가 30분 이상 지속하면 배꽃 암술머리 등이 겹개 변하는 등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5월 착과 이후 정밀조사를 거쳐 농약대 등을 직접 지원하고, 생계지원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사 조사를 거쳐 보험료를 받는다. 배·사과·단감·딸은 감 등 4개 품목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4800ha로 전년 2019ha 대비 138% 급증, 농가가 실제로 감당할 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제는 저온 피해가 3년째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겨울이 이전보다 덜 추워지고 봄철 저온 현상이 굳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해보험 장려 및 보험금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저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 지원으로 대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전남지역 배·사과·단감·딸은 감 농

가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설 강화로 무게 추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정부와 전남도, 시·군이 80%를 부담하고 농가는 나머지 20%를 부담한다. 전남지역 배·사과·단감·딸은 감 등 4개 품목 재해보험 가입비는 266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가 부담 20%를 제외한 80%는 국·지방비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서리 등 저온피해 방지 대책으로는 연소법, 포그시스템, 송풍법, 살수법 등이 거론된다. 이 중에서도 저온시 과수 주변에 작은 물방울을 뿌려 주변 온도를 높이는 살수법·포그시스템이 유망 대책으로 꼽히지만 농가들은 초기 시설 투자부담으로 도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법제처, 김대중컨벤션센터서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권역별로 순회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법제처는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및 영남권 공청회를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호남권 공청회는 22일 오후 2시에 광주 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공청회는 29일 오후 2시에 부산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 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어 왔다.

또한 공통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 사항을 보완,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참석 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다음 달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학교수와 17개 대학의 총학생회장 등이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호남권 대학교수·총학 “방사광가속기 나주에 유치해야”

호남 국회의원 당선자·김영록 지사, 23일 정부·민주당에 건의문

호남권 대학교수와 총학생회가 지역 최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에 힘을 보탰다.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는 광산구가 측면 지원에 나서는 등 호남권 유치를 위한 각계의 지지 성명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북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28명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대형주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치계획서 접수 마감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방사광 가속기를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21일 호남권 대학교수와 총학생회장들은 전남대에 모여 대학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 대학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중심으로 대표교수들이 참석했으며, 총학생회는 광주 전남총학생회 김준연 의장을 비롯 호남권 17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

호남권 대학 스승과 제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과 소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초과학은 물론, 모든 첨단 연구기술 개발이 가능한 차

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호남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의 농업 바이오·탄소산업, 광주의 AI·자동차 산업, 전남의 에너지신소재·의료 바이오산업 등 호남권의 핵심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전국 최하위인 호남권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과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2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전달한 뒤 국회에서 건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국회의장 등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막바지로 접어든 1조원대 국책사업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은 나주와 경북 포항,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등 4개 자치단체들의 막판 경합이 치열하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은 오는 2027년까지 방사광 가속기와 부속시설을 설립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최근 호남권 대학 총장들이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구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2개 시장군수를 비롯 의회, 향우, 과학기술인 등 각계각층에서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을 잇따라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광산구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21개 동 주요 도로 등 곳곳에 '대한민국에 노벨상을 안겨줄 제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나주시) 유치를 지지합니다'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형 긴급생활비' 신속 지급 합의

김영록 지사-22개 시장·군수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내 22개 시장·군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도·시·군 영상회의를 갖고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신속히 지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난 7일부터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시행에 나섰다.

20일 현재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가구는 23만여 가구로, 32만 가구 계획대비 72%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이같이 신청가구 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총선 업무 수행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시책 사업 등으로 일선 시·군, 읍면동의 업무부

담이 과중해 선정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전남도는 영상회의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도민에게 신속히 집행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신청과 지급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강진군 사례를 공유하면서 타 시·군에 신속 지급을 독려했다. 강진군에서는 온라인 접수는 군청, 방문 접수는 읍면동으로 구분했으며, 신청 대상 가구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급결정 권한을 각 부서에 부여하고, 일선 읍면동 업무 부담을 크게 완화하면서 지급 실적을 높였다.

전남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거업무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상자 선정 및 상품권 지급을 위해 한국 조폐공사와 협력, 상품권 확보 등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도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금호2동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구역' 지정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등 추진

광주시가 서구 금호2동(면적 1.19㎢)을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 시행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9개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이 이용 시설 밀집도, 자치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호2동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8곳은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범구역 지정에 따라 ▲대기 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원일 기자 cki@



The plate you've been waiting for

현상기가 필요 없는 KODAK SORONA 무현상 판재

코닥 SORONA 무현상 판재는 전 인쇄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판재입니다.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아 환경규제에 대한 염려없이 친환경 인쇄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으며, 높은 내쇄력을 제공하여 경제성과 생산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현상 판재입니다.

SONORA! CAN PRINT THAT!

문의: 한국코닥㈜ **02-3438-2600**
서울시스템기술㈜ **062-226-4093**